

“이스라엘 넘어라” 1兆 유니콘 기업 4배로 ‘벤처강국의 꿈’

중기부, 官서 민간 중심 대책으로 모태펀드 자율성·수익성 확대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내놓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지난해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에 그친 신규 벤처투자규모를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도 550개(2017년)에서 800개 이상(2022년)으로 확대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2개뿐인 ‘유니콘 기업’을 4년안에 8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다 4분의1 수준인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수의 유니콘 기업(2곳)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들을 통칭하는 말인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회사인 옐로모바일과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석준홍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모태펀드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를 폐지하면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홍준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을 촉진해 벤처투자 규모가 2022년엔 지난해의 약 1.8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벤처투자시장이 벤처강국 그룹 수준에 근접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우리나라가 2016년 현재 0.13% 수준으로 미국(0.37%), 중국(0.28%), 영국(0.16%)에 한참 뒤쳐져 있다. 이 수준을 4년 뒤엔 0.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이날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당시 폭발적인 ‘벤처붐’을 경험한 이후 활력을 계속 잃고 있다는 위

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스위스 UB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는 전 세계 139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유니콘 기업도 현재 미국은 113개, 중국은 61개로 우리가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1986년 당시 제정한 창업법과 1997년 만든 벤처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창업법은 창업투자회사나 조합, 액셀러레이터, 벤처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기존에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했던 한창투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해 숙박업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창업투자조합이 숙박·음식점업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료와 ICT가 만나 헬스케어, ICT와 금융이 만나 핀테크로 각각 발전하는 등 민간에선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지만 기존의 벤처투자제도는 법률적 제약이 많아 이같은 신산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고, 후속투자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 폐지, 창투

사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투자생태계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 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6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카카오, 국내 첫 AI ‘알고리즘 윤리 헌장’ 발표

AI기술 지향점·수집 관리 원칙 등

카카오는 31일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 중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을 마련해 외부에 발표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는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카카오 AI 기술의 지향점, 결과의 의도적 차별성 방지, 윤리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및 수집 관리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알고리즘 관리의 독립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방침도 포함돼 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은 카카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특히 이날 발행된 AI 지식 매거진 ‘카카오 AI 리포트’ 1월호에는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이 수록된 배경과 각 항목별 설명 등이 담긴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해제’가 게재됐다.

임지훈 대표는 “카카오만의 원칙과 철학에 기반한 알고리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의식을 갖춘 AI 기업이 되기 위해 전 구성원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우원식 “‘사회적 대타협’ 유일한 탈출구”

‘사회적 연대 위원회’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면서 “노사정위윈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하다”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윈회의 사회적 약자 목소리 반영 통로 부족, 국회 배제 등 아쉬움을 지적하며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대타협의 제도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정부,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3000억 펀다

(연간)

전 부처 공무원 복지포인트 30%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올 한해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어치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각계 각층에 보내는 올해 설 선물 명단에는 지난해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일부 주민과 지역혁신활동가, 최전방 경계군인, 취약지역 근무 소방관 등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경도 총무비서관은 31일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30%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공동구매해 설 연휴에 주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청와대 직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액수는 1억6000만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5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꾸러지면서 한 해 상품권 구매액수는 약 90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올해 설을 맞아 각계·각층 1만여 명에 보내는 선물에는 평창 감자술 ‘서주’가 포함됐다.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는 약 1만명 중에선 사회배려계층이 60%가 넘는 6200~6300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통상적으로 30~40% 가량을 사회배려계층으로 채워왔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엔 포함되지 등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보낸 만큼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을 포함해 여러 사회배려계층에 대통령 선물을 발송했다”면서 “선물은 7~9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올해 설 선물에

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생산한 감자로 만든 전통주 ‘서주’를 비롯해 지역별 특산물인 강경(경기 포천), 조청유과(경남 의령), 약과(전남 담양), 편강(충남 서산)이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판매 촉진과 소비확대에 나섰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10개 봉사팀이 중증장애인 시설,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단 방문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문화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安, 통합 후 ‘백의종군’ 선언 카드 내밀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후 백의종군’ 카드를 던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달 13일에 통합신당 창당을 완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합의 올바른 길에 한 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고

록 제 사퇴가 그분(중재파)들의 결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 대표가 통합 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재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에 한창인 민주평화당 1000여명 당원의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며

통합 문제를 결정지를 예정이었던 2·4전당대회가 난관에 부딪히자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 후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중재파와 반대파의 반응은 안 대표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중재파는 다음달 13일이 통합전당대회가 예정된 날로 국민의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퇴 아닌 사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중재파가 제시했던 ‘조기사퇴’ 카드도 사실상 거부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창원 기자